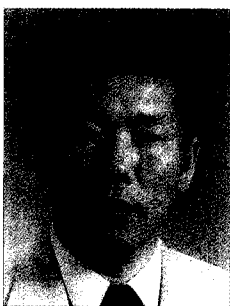


플라톤의 「이데아」와 21세기 정책방향



최 민 호
(崔珉鎬)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제도담당관
(前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충청남도청

1. 플라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태어나 기원전 347년 제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조용히 잠들기까지 80년의 생애를 통해 그 후의 2500년간의 인류의 무지와 철학적 각성을 깨우쳐 준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이다.

에머슨은 「플라톤이 철학이고 철학은 플라톤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공화국」이라는 명저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태워 버려라. 이 책 안에는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찬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감명과 예지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그 자신의 학교 「아카데미아」를 설립한 그리스 철학의 최고봉인 그는 아름답고 정력적이고 병사로서도 뛰어난 기량을 가진 문자 그대로 다방면의 천재였다고 한다. 플라톤

이라고 불리어진 것도 그가 어깨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의 「이데아론」이 주는 시사 때문이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사회 각 방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정립에 국가적 진운을 걸고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투적인 구호 - 세계화, 정보화 또 지방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세우고 있을 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 변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서질 않는 경우가 많다.

소위 변화와 개혁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철학의 빈곤에 스스로 고민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방향하는 대중에 이데아이

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눈앞을 환하게 밝혀 주고 있다.

그의 이데아론이 우리의 21세기의 정책방향에 어떠한 빛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인지 우선 플라톤을 이해해 보기로 하자.

II. 플라톤의 「철인정치」

학창시절 우리는 공자는 「왕도정치」, 플라톤은 「철인정치」라고 수없이 외우고 써왔다. 왕도정치는 덕이요, 철인정치는 철학이다.

그의 철인정치가 「이데아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음을 몰랐던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책수행을 위한 역량개발에 있어 큰 깨달음 하나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플라톤은 그의 철인정치를 다음과 같이 풀어 나간다.

「사람에 따라 국가도 다르다. 국가는 그 안에 사는 인간성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현상은 시민현상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 훌륭해지지 않는 한, 더 좋은 국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플라톤은 간단한 문제 - 예컨

대 製鞭에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제화공들만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투표를 조종할 줄만 알면 누구든지 도시나 국가를 다스릴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탄식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품성과 교육의 완전한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토피아(공화국 : Republica) 건설을 제안한다.

우선, 10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모두 시골로 보내어 어린이들을 격리시켜 아버지의 버릇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재능이나 천재의 빛은 어디서 번쩍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된 어른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켜 지위나 인종을 불문하고 공정하게 이 빛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10세까지는 주로 체육을 시켜 평생을 지탱할 건강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에게 온화하면서도 동시에 용감한 성질을 갖게 하기에는 경기와 체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영혼은 조화와 리듬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음악이다. 음악은 감정과 정서와 성격을 세련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의 유지와 회복에도 이바지한다. 그러나 시민은 음악에만 침잠하면 감정적이고 유약해 질 수 있다. 용기와 정신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믿음은 내세의 삶에 희망을 주며 자기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감내할 용기를 준다. 그는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건강, 정서, 용기라는 심성 외에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은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자발적인 자유에 의해 수학, 역사, 과학 등의 기본과목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20세가 되면 그동안의 공통과목의 성과나 노고와 고통과 투쟁에 대한 지극히도 엄격하고 공정한 시험을 치르게 하여 무자비한 평가를 당하게 된다. 이 시험은 공평무사하고 연고주의나 배경에 의해 결코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보다 더욱 민주적으로 실시되는 가장 쓰라린 이 시

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대단히 많게 된다. 플라톤은 이를 「대량제거」라는 혹독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그 사회의 상인이나 점원, 공장, 노동자,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초의 이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다시 10년동안 육체, 정신, 성격에 걸쳐 중고급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이리하여 30세가 되면 그들은 최초의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제2의 시험을 받게 된다.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자를 金, 銀, 銅 중의 銅이라 한다면, 이 시험에서 실패한 자는 말하자면 銀과 같은 사람들로,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 국가의 보조원, 즉 공무원이나 군장교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탈락을 거부하고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하여 지도자를 탐낸다면 어떻게 될까? 플라톤은 그들을 눈물로 호소하여서라도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의 신화」

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金인 사람은 신이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아들은 금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 銀이나 銅인 사람은 자기는 은/동이지만 그의 지식은 금일 수도 은일 수도 있으니 사람은 누구든지 자식을 통해 종족을 유지하는 것으로 금의 아들도 동이면 동으로 대접하고, 동의 아들도 그가 금이라면 누구든지 금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정의와 도덕으로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속된 선발의 물결에 살아 남은 행운의 잔류자는 그 후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철학을 배운다. 최상의 인간으로 金인 그들은 명석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데아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향후 5년간을 이 이데아를 교육받는데 보내게 된다.

III. 이데아(Idea)

「이데아」란 무엇인가?

「이데아」라는 것은 일반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실재성이 없는 말하자면 기본법칙이요, 일반성

이요, 규칙성이요, 사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데아가 무엇인가를 서술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심연에 빠져들 것이다.

플라톤은 비유를 들어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어느 동굴에 괴수가 살고 있다고 하자. 이 괴수는 동굴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괴수의 진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어느날 동굴속에 서부터 빛이 새어나와 그 괴수의 그림자가 동굴밖에 비치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괴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또는 저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즉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그 실체를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시간에 따라 또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괴수의 모습은 제각기 그 모습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金인 사람들과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현상을 종합하여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배움으로써 동굴

안에 사는 괴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동굴안의 실재의 괴수 - 현상만을 좇아 사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파악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의 존재 -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본질 - 이것이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세워져 있다. 이 다리는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과 모래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과 자동차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 다리는 튼튼하다. 왜 튼튼할까? 무엇이 저 다리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그것은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 같이 튼튼한 재료가 이 다리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다면 그것은 현상만을 이해한 해답이 된다. 「이데아」를 이해하는 金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그것은 “시멘트와 철근과 벽돌 등이 배합되어 나타나는 장력때문이다”라고 즉, 다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 같은 재료가 아니라 재

료에 의해 생성된 공학적 법칙, 수학적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이나, 법칙 또는 영속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이데아」인 것이다.

「이데아」가 없으면 세계는 난관이 처음 눈을 떴을 때 본 세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곧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개별적 감각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사물을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경우에만, 사물의 존재법칙과 사물의 활동목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사물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아를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문제를 보다 근원적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해결책 또한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년간 이데아라는 고급 철학을 배운 「金」들은 그후 어떻게 되는가? 35세가 된 그들은 이제 철인이 되어 사회의 지도자로서 인류를 다스리고 군림하게 되는가? 애석하게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배운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철학박사들은 「철

학의 언덕」으로부터 인간과 사물의 「동굴」로 떨어뜨리지게 된다. 그들은 현실세계의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비합리적인 나라에 뛰어 들어 「세상」을 겪어야 한다. 거칠고 거친 현실속에서 그들은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하고 싸우고 흘려야만 한다.

얼마동안? 15년간 - 그리하여 거꾸러지고 아니면 안주하여 탈락된 자를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상처투성이로 살아남은 金 - 그들은 50세가 되어 있다. 냉정하고 자신에 넘치며 삶의 무자비한 알력으로 학자적 허영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전통과 경험, 교양과 투쟁이 합쳐서 이루어진 지혜로 무장된 그들, 그들만이 철인이라 불리우며, 비로소 국가의 통치자가 된다.

IV. 정책과 「이데아」

긴 플라톤 철학의 산책로를 끝내고 이제는 「극장 밖」의 현실로 나와 보자.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열고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귀가 따갑게 외

치며 찾아다니고 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방향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우리의 관심사이다. 어디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이라 하는 것을 주민욕구의 충족이라 하든, 행정수요의 대응이라 하든, 문제의 해결이라 하든, 또는 미래의 비전의 제시라 하는 정책입안자의 시선은 우선 정책대상의 본질과약, 즉 「이데아」에 그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현상의 껍질을 몇 껍질이든 벗겨내어 껍질속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core)을 적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은 비록 금의 자질은 못가졌을 지언정 그 시대의 금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늘 현상처방에 급급하였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미봉책이라든가, 임시응변식이라든가 근시안적 발상이라든가 朝令暮改식 법제도라는 말은 우

리가 익혀들어 온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정책방향의 이데아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나는 「시대」라고 보고 시대에 얹힌 話頭를 하나 던지고자 한다.

즉, 역사적으로 각 국가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해왔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패망의 길로 나서고자 의도했던 나라가 있었을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잘되기를 바랐던 그 길이 어디서 잘못되어서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가 지금은 후진국의 밑바닥 언저리에서 과거의 영화만을 되새김질 하고 있는가 하면, 보잘 것 없는 야만국이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는 것일까?

역사의 이러한 반전을 간단히 그 시대의 국민정신으로 귀결시키는 논리에는 나는 찬동할 수 없다. 국민정신을 이끌어내는 動因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나는 현재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는 다음 몇가지의 역사적 경로

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① 12C에서 16C까지 즉, 서구에서 중세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 각국이 당시의 사회적 이념, 과학기술, 사상, 예술 및 각각의 織城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였는가? ② 당시 해외로의 진출에 어느 정도로 자유로웠고 또한 국가적 지원이 있었는가? ③ 대내적 대외적 환경에 있어 상호경쟁의 요소가 어느 정도로 강했는가?

첫번째 문제는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과 이를 통한 성취의 범위를 의미한다. 창의를 숭상하고 다양한 기술과 학문,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발전은 이리하여 가능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캘비니즘, 일본에서의 유학중 양명학의 발달, 미국에서의 청교도에 입각한 개척정신의 발현과 현대 과학문명 등은 이러한 사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기술의 발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개방성과 진취

성을 의미한다. 해외진출을 통해 무역의 증진,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해외 경영을 통한 식민지 획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서양의 속담은 곧 무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자국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까닭 또한 무역을 보호하며 교역상의 교두보 확보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번째 경쟁성,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내적으로는 봉건제의 존재요, 대외적으로는 전쟁이었다. 군웅할거의 생존경쟁과 전쟁을 통해 적자만이 살아남는 치열성을 배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결국 군사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이 결국 제국주의를 태동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세가지 조건 중 모두를 다 보유한 나라는 현대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국가 중에서도 그 후 이러

한 조건을 상실한 나라는 다시금 낙후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동유럽의 공산국가에서 우리는 그 전형을 본다. 첫번째의 이념의 확일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그들은 발전을 멈추고 만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는 당초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었다. 그들이 이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이다. 그 후 그들은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된다. 대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은 단일이념체제, 종교적 폐쇄성, 土農工商 등 신분과 직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말았다.

고대 인도문명의 발상지이자 찬란했던 굽타문화와 불교를 배태(胚胎)해 낸 대국 인도가 어찌하여 아직도 후진국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인류 最古의 문명지였던 이집트,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현대 기초과학의 원조국인 중동의 아랍국가들은 무엇의 질곡에 빠져 저토록 낙후되고 말았는가? 종교적 확일성과 맹목

성, 카스트제도 같은 신분제도, 남녀의 차별이 저들의 발전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유교의 단일 이념체제에서 강력한 신분제도와 직업의 귀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만을 고수하였던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기원전 700년경에 발원하여 불과 53년만에 지중해의 패자로 등장하는 고대 로마제국의 융성에 대하여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라틴민족만이 아닌 다양한 인종을 통합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협조와 협동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종교에 관한 포용성과 패자까지 동화시키는 로마인의 생활방식에서 찾는다. 한마디로 이를 개방성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V. 21세기의 정책방향

「시대」를 화두로 하였던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우리의 정책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앞에서 전개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 역시 우리사회는 위의 세 가지 여건, 이를 축약해서 말한다면, 첫째 다양성과 둘째 개방성과 셋째 분권성을 더욱더 신장시켜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첫째 다양성이란 생물학에서 말하는 「리비히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또는 각각의 직업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영양소와 같은 것이다. 비록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비타민이 있어도 그것만 충분하고 하찮게 보이는 탄수화물같은 것이 부족하다면 인체는 그로 인해 병을 얻어 건강을 잃듯이 영양소는 골고루 어느 한쪽에 편중됨이 없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리비히는 이를 물통에 받아질 수 있는 물의 양은, 통을 만들고 있는 여러 조각이 판자 중 가장 낮은 판자의 높이에 결정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최소량의 법칙).

국가사회도 유기체인 이상 각

인의 능력은 그 모두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직업에 우열이 있거나 차별이 있는 사회는 그 분야에 있어 취약점이 생기게 되고 그 취약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며 그만큼 경쟁력은 약해지고 말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자로는 켤 수 없는 무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부문의 능력개발이 앞으로 미지사회의 선도분야가 될런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을 초래시킨 컴퓨터의 존재를 100년 전의 어느 석학인들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눈뜨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다양성을 지원하고 추구하며, 그 기회를 균등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야 하는 앞으로에 있어서 각 부문의 다양한 발현,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라 할 수는 없으리라.

따라서 각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살

려주어야 하는 정책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사회의 전통적인 행정직 우위의 인사운용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이익은 따라서 과감히 철폐되어야 하고 하위직의 언론을 막거나 상의하달식의 지시일변도의 업무태도는 반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의와 개성은 최대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학력에 의한 편견이나 사법고시에 집착하여 인생을 거기에 거는 식의 가치편중된 직업관은 제도적으로 이를 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소위 의사, 변호사 등의 「사」字 돌림의 직업에 대한 재평가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특권」과 「폭리」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우리 직장 구성원의 특기조사를 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못보고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특기와 정보력을 최대한 조직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은 누구에게도 평생을 바쳐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大家가 될 수 있는 재능을 한가지씩은 주셨다는 신념을 나는 믿는다. 가치관과 환경에 의해 자기 재능을 못살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평생을 힘들어 하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목도하였던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선택에 강요를 하지 말아야 할 소임도 여기에 있다. 어쨌든 자기 직업이나 지위에 예절이 아닌 차원에서 끌려하거나 비굴해하거나 반대로 거만하거나 과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갖는 것, 이것이 다양성의 첫번째 출발이다.

둘째로 개방성이다.

나는 개방성이야말로 그 인간 또는 그 사회의 폭이라 생각한다. 다시말해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르던 존재와의 공존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모르는 것과 문을 닫아 걸면서

무슨 확장이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사회가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는 따라서 얼마나 개방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21세기의 세계의 주역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아닌자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그 이상으로 더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얘기하자. 개방이란 내가 모른던 것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다. 개방을 해외교류의 증진이라는 식의 측면에서 우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현상적」이고 지엽적이다. 마음의 개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개방성의 가장 큰 적은 배타주의 의식이며 우리에게 있어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지연과 학연과 혈연일 것이다.

즉, 연고주의인 것이다. 학벌과 지연, 혈연이라는 지독히도 배타적이자 비개방적 사고방식의 철폐는 규제완화보다 더욱 시급한 우리의 정책과제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그 지

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타 지역 아니 외국인이라도 우리는 쓸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내 지역, 내 고향만을 애지중지해서 우리 지역사람만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중의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타 지역 사람을 과감히 써야 할 것이다.

읽은 책만 읽은 사람에게 무슨 지식의 확장이 있겠는가?

내 지역에서만 살아온 사람만 으로서는 그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전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한다. 애향심만으로 고향을 발전시키기에는 우리사회는 너무 커졌고 세계는 너무 복잡해진 것이다. 공직사회의 인사교류는 과감히 개방하여야 하며 연고지배치 인사에 연연해서는 결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長의 3개월의 입후보 거주요건도 시대에 따라 재고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市郡, 우리道 직원이 아니면 승진하기 어

려운 인사관행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다.

참고로 선진 외국에 議員이 아닌 長의 입후보 거주요건을 법정화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제도가 가장 흡사하다는 일본을 포함하여 나는 그 예를 알지 못한다. 또 일본의 지방공무원 인사원칙에 연고지 배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비단 인사분야 뿐이겠는가?

개방성이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많이 나가 그들과 동화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도 깨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 널리 마음을 허용해 주고 우리의 울타리로 넣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욱 손쉬운 개방이다.

세째로 분권의 추진이라 했다.

분권과 반대되는 개념은 일단 집권이다.

분권과 집권, 이것은 그 자체로 선악 또는 우열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권과 집중이 훨씬 더 효율적 이요, 강력할 수 있다. 국가건설의 초기단계나 위기상황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는

상황논리일 수 밖에 없다.

앞에서 유럽에 있어 봉건사회의 분권화를 통해 균형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나서 절대 왕조 시대를 거쳐 통합화가 이루어진 다음 계층의 분화를 통해 각계의 화려한 발전이 이룩된 것은 선진화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길고도 너무나 긴, 집권 집중의 역사를 가졌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발전으로도, 퇴보로도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또한 앞으로의 시대상황을 조망할 때 이제는 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돌이키지 않고 돌을 놓고 싶다. 지금의 분권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양화요, 경쟁화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전략이라는 방향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하듯이 조직내부에서도 분권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로 일말의 의문을 갖는다면, 여기서 깨끗이 털어 버리자. 해야 옳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정력을 집중함이 옳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허부로의 권한의 위임의 중요성을 구두선으로 끝내서는 미래가 없다. 국정의 모든 잘못을 대통령에게 돌리거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 반대로 공은 상관이 책임은 부하가 라는 전부 아니면 제로(all or nothing)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분권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다. 그동안 권한의 허부 위임을 그렇게 외쳤왔건만 잘 안되는 이유는 바로 결국 문제가 생기면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이 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는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분권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고 경쟁을 거쳐 발전은 도모된다. 그러나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는 드라이하고 살벌해 진다. 인간미도 없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해 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인 룰(rule)이라는 것이고, 페어플레이라는 것일 것이다. 정한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더티

(dirty)한 플레이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으면 분권과 경쟁은 이전투구식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공권력은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자들인 우리는 이점에서 느슨해지거나 관대해져서는 아니된다. 융통성이라는 미명아래 규정의 적용이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그러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정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분열이라는 것이다. 이기주의도 결국 이곳에서 만난다. 분권주의에 맞들리면 누구나 자기앞에 곱감을 더 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플라톤과 스승인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함정으로 인해 「민주정치는 민주주의의 과잉에 의해 망한다」라고 하여 경계하였던 분권성의 독소.

참고로 말한다면, 플라톤은 민주정치가 망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전제정치라 하였다. 분열과 이기주의에 식상한

대중은 다시 그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열심히 「철인정치」를 구상하여 주장한 것이겠지 만……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권을 추진하고, 분열을 막을 것인가? 그 답변에 아마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사회가 다양화 되고 개방화 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그들간에 「합의」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正義라는 이름의 일반논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다양화와 개방화는 더욱 필요한 우리시대의 방향이리라.

Ⅵ. 논의의 정리

21세기의 정책방향을 논하기로 하고서는 결국 국민의식의 문제로 논점을 귀결시킨 감이 들게 되어 버렸다.

앞서 말했듯이 한나라의 발전

을 그 시대의 국민정신에 귀착시키는 방식을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국민정신이나 의식에는 그것을 그렇게 형성시킨 어떤 시스템, 즉 어떤 환경이나 체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나는 제도요, 정책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설과 같이 얘기되는 「운영이 중요하지 제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제도의 정책수립에 있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바꾸어나가야 할 방향, 그 출발점을 논해보자는 것이 이 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화, 개방화, 분권화라고 나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영고성쇠가 반드시 위에서 얘기한 세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독단에 불과할 것이다. 어찌 한 국가의 흥망이 그렇게 세가지 정도

에 의해 단순하게 결정되었는
가? 따라서 국가의 정책방향이
라는 것도 간단명료한 해답이라
는 것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
의의 첫 출발에서 소개하였듯이
이 사회에 있어 현상이 아닌 본
질적인 무엇, 즉 이데아라는 것
에 의한 방향설정 또한 없으리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이라는 것도 이것이 「충분」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지
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나
는 양보하고 싶지 않다.

또 21세기 시대의 발전방향에
맞는 정책의 형성과 추진, 그것
에 책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에 나는 더욱이 양보할 수 없
다. 물론 다원화 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의견이 중요하고 정치기
능이 라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전문화 시대에 있어 정책전문가
는 프로행정가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는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위

해 “자! 우리 벗어 버리자” 에
고이즘의 갑옷을 벗고, 일제시
대때 교복에서 목을 조르던 그
뻣뻣했던 자기권위의 후크를 풀
자. 내것을 감추고 있는 단추도
열자. 그리고 가슴 가득히 바깥
의 대기를 들며 마셔보자. 생각
만 해도 신선하고 트인 기분이
들지 않는가? 감기가 걱정이 되
서 못 풀겠거든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써라. 그리고 다
시는 세상밖을 나오지 마라. 감
기는 전염되는 것이니까!

열린중남